

# NPT 체제와 이란

일시: 2010년 8월 24일(화) 저녁 7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노틸러스 아리,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 NPT와 이란 핵문제 바로알기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핵개발 논란 둘러싼 이란 현지의 목소리

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2010 NPT 재검토회의와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김수현/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정책연구위원

## NPT와 이란 핵문제 바로알기

정옥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과 이를 따를 시에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이란의 경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이명박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MB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 외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과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측면이 강하다. 제재의 근거가 된 이란의 핵문제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적인 분석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파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란 핵문제는 글로벌 지정학과 지경학에 핵심적인 변수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최근 파문은 맛보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는 그동안 이란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국의 시각에서 독립되어 한국의 눈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NPT 탄생의 주역에서 핵확산의 주범으로?

21세기 들어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이란을 북한과 함께 대표적인 핵확산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냉전 시대의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탄생의 주역 가운데 하나였다. 이란은 NPT에 1968년에 서명하고 1970년에 이 조약에 비준함으로써 NPT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1979년 혁명 이전까지 이란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 원자력 협력 관계를 맺었었다. 여기서 친미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란의 핵 개발을 도왔던 서방 국가들이 이란 혁명 이후 핵개발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확산과 핵확산을 가르는 잣대가 국제 규범보다는 자국과의 친밀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국제정치의 굴절된 현실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주부터 가동한 이란의 부쉐르 원전은 최초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란 혁명 이후 미국은 이란의 원전 활동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고, 이에 이란은 원전 협력 대상을 러시아로 바꿔 이 원전의 가동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란이 핵 개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이라크와 전쟁(1980-1988)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이라크가 이란을 상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란에서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효과적

으로 보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서가 팽배했다. 그 결과 1987년과 1990년에 각각 파키스탄 및 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고, 러시아도 이란 원전 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란의 민수용 원자력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개입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지부진했다.

이란 핵문제가 국제 사회의 초미의 관심을 끈 것은 2002년 하반기 들어와서다. 파리에 체류 하던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을 이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소규모 농축 시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중수로와 핵연료 공장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IAEA는 2003년 9~10월에 걸쳐 핵사찰에 실시해 11월에 결의안을 채택했다. 핵심 내용은 이란이 IAEA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과거에 은폐된 핵 활동이 있었고 신고한 내용과 IAEA가 사찰한 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핵문제가 불거지자 이란 정권은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2003년 10월 유럽 3개국(프랑스, 영국, 독일)과의 합의를 통해 IAEA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유럽 3개국과 추가로 합의를 해 "호혜적인 방향으로 장기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하고, 우라늄 농축뿐만 아니라 원심 분리기 생산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온건 정책을 주도한 인물은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인데, 그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란의 발전을 도모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2005년 6월 대선에서 대 서방 강경 노선을 표방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란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의 등장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정권 교체 대상국으로 삼고, 이라크 침공에 이어 이란 침공설이 맹위를 떨친 점이 크게 작용했다. 2005년 8월 이란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과 유럽 국가들의 합의 위반을 비난하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IAEA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고, 유엔 안보리는 의장 성명을 통해 이란에 즉각적인 농축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이란이 안보리 의장 성명을 거부하자 안보리는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면서 중수로 건설 계획을 발표해 서방 국가들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부과와 이란의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는 악순환을 형성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사이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해, 2009년 11월에는 1763킬로그램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면 핵무기를 한 개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20~25킬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부셰르와 아라크에 중수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했는데,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경수로에 비해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원자로다. 아울러 2009년 9월에는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 이어 쿰에 제2의 농축 시

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IAEA에 신고하기도 했다.

## 이란 핵문제의 본질적인 성격들

이러한 이란 핵문제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얹혀 있다. 우선 대표적인 '이중 용도' 기술인 핵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저농축을 하면 핵연료나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고농축을 하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세계 3, 4위의 석유 생산 대국인 이란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란은 "언제 고갈될지 알 수 없는 석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에너지 수급 체제를 다변화하고 석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한 이란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용 원자로 보유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원자로로는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3~5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20퍼센트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사용된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20퍼센트 농축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생산·보유하면, 무기급에 해당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훨씬 빨리 확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우선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는 NPT 회원국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란이 IAEA 사찰을 성실히 받으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를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극히 취약하다. 이를 근거로 이란은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는 주권 국가이자 NPT 회원국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못 박는다.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보하면, 언젠가 NPT에서 탈퇴해 북한의 길을 갈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NPT는 최고의 국가 이익이 침해받을 때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NPT를 개정해 탈퇴국에 대한 제재 조항을 넣기를 희망했지만, 번번히 무산되어왔다. 2010년 NPT 검토회의에서도 미국은 이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란의 거센 반발과 핵보유국의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많은 비핵국가들의 반대에 막혔다.

세 번째는 대안을 둘러싼 논란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면서 유럽 연합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원자로 가동과 의료용 연구 원자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외부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란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핵연료를 제공하고 사용 후 연료봉을 회수하는 당사자가 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핵연료를 외부에 의존할 경우 그 연료를 제공하는 국가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핵연료 주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핵문제에 미국이 적용한 이중 잣대에 이란이 근본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의 숙적인 이스라엘은 미국과 프랑스의 방조 속에서 핵무기 개발해 성공해 오늘날에는 100~2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 강대국이다. 중동 국가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중동 비핵 지대' 창설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그러나 NPT 비회원국인 이스라엘은 이 조약에 가입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 핵문제를 NPT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게다가 미국은 NPT 비회원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묵인했다. 더구나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부시 행정부는 파키스탄에 지속적으로 경제적·안보적 지원을 했고, 인도와는 핵협정을 체결해 핵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베트남과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자체적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이중 잣대는 이란으로 하여금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불만을 증폭시키면서 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탄도 미사일 문제다. 핵무기는 운반 수단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에 핵보유국들은 전략 폭격기, 잠수함, 탄도 미사일 같은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탄도 미사일은 신속한 중장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중간에 격추당할 가능성도 적어서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가장 유용하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미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한 이란은 2009년 2월 초, 3단계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 서방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론적으로, 3단계 로켓은 탄두 중량을 늘리고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보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개발에 이어 장거리 로켓 능력을 확보한 것은 서방 세계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은 인공위성 발사체든 탄도 미사일이든 로켓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 이란은 핵무장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과연 이란은 핵무장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란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란은 '평화적 목적'에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 북한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핵무장은 다른 나라, 특히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상호작용 및 득실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핵협상 대표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수장을 역임한 하산 로와니의 2004년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 속에 이란의 목표와 핵문제 해법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도, 브라질이 핵연료 주기를 갖추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손에 넣었고 브라질도 핵연료 주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는 이들 나라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 우리의 문제는 그 어느 것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 문턱에 서 있다. 핵무기 제조와 관련해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핵연료 주기도 완성하지 못했다."

이 발언의 핵심은 이란이 원하는 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핵연료 주기를 완성해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 타임스>는 "로와니의 연설은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전술적인 이견은 존재하지만,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05년에 핵무기 생산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란 문제 전문가인 주안 코일 역시 "이란의 목표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에 있다고 지적한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보유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진 않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그는 "핵 잠재력 확보는 핵무장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핵보유보다 이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이 문턱을 낮추면 이란 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란의 목표가 핵무장 자체가 아니라 핵연료 주기 달성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타협의 접점은 미국의 로비 단체인 재미 이란 동포 위원회 회장인 트리타 파르시의 제안 속에 담겨 있다. 그는 "만약 이란의 목표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의 목표가 이란에 핵무기가 없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면,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불허'라는 비현실적이고 차별적인 목표를 거둬들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체제 강화를 선택한다면, 이란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란은 자신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 권리가 인정되면, IAEA의 감시와 사찰 강화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인 해법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를 인정하면서 강력한 감시와 검증 체제를 구축해, 이것이 핵무기 개발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검증 체제 강화 차원에서 이란에게 IAEA 추가 의정서의 비준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로 말하면, 이란은 IAEA 추가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2010년 아직까지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란이 이 의정서를 비준하게 되면, 사실상의 전면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핵무기용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부시는 물론이고 오바마의 태도도 완강하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불허'는 부시뿐만 아니라 오바마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저농축을 하면 핵연료로, 고농축을 하면 핵무기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이중 용도' 기술이다. 특히 이란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핵 잠재력'에 도달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저지에 앞서 핵무장에 성공하는 '돌파 능력'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미국 강경파들이 이란에 이러한 잠재력을 남기는 타협안을 가만둘 리 없다. 오바마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보유와 감시·검증체제 강화 사이의 교환'에 기초한 타협안을 추진하면 미국 내에서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반격도 거셀 것이다. 최근 오바마가 초강경 정책을 고수하는 데에는 11월 중간 선거와 2012년 재선을 겨냥한 '국내 정치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란 핵문제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과 이란의 반격 속에 '지옥의 문'은 또 다시 열리고 말 것인가? 반대로 이란 핵문제 해결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동맹의 덫'과 '이란의 경고'에 걸린 한국 외교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까?

## 20%를 둘러싼 갈등

이란은 라마단이 끝나는 8월말-9월초에 핵협상을 제안해놓고 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8월 19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독

일(P5+1)과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이란이 제안한 협상안의 골자는 이란이 보유한 저농축 우라늄과 서방국가들의 핵 연료 제공을 교환하자는 것이다. 이전까지 이란은 미국이 제재와 위협을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핵분열물질인 우라늄-235를 20%까지 농축하는 활동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테헤란 소재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마디네자드는 “핵 연료 제공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하는 것에서 멈추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하게 되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즉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참고로 IAEA에서는 20% 이하를 저농축 우라늄으로, 그 이상을 고농축 우라늄으로 분류해, 20% 이상 농축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이 20% 우라늄 농축 활동 입장을 고수하는 한, 미국이 대화에 임할 지는 극히 불확실하다. 이를 반영하듯, 23일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이란이 제안한 대화의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결론적으로 이란 핵문제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 인정 여부이다. 이란은 NPT 회원국으로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이란의 의도를 의심한다. 또 하나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농축 활동을 인정하느냐이다. 이란은 20%까지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이것을 인정하면 이란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돌파 능력(breakout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 핵개발 논란 둘러싼 이란 현지의 목소리

김재명 / 국제분쟁전문기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이란 지식인들의 시각을 요약해보면...

- 이란 핵개발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핵에너지 개발, 따라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다.
- 이스라엘을 보라, 쓰지도 못하는 핵무기 갖고 있으면서 욕만 먹지 않느냐
- 미국은 NPT 가입도 안한 이스라엘을 감싸고, NPT 회원국이자 IAEA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중잣대가 아니고 뭐냐
- 이란의 핵모델은 북한이나 리비아가 아니라 일본이다.
- 우리 이란은 핵기술을 축적해놓고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기 만들 것이지만, 현단계는 어디까지나 '핵의 평화적 이용'이다.

아래 글은 2009년 2월 이란 이슬람혁명 30주년을 맞아 이란을 다녀온 뒤 <프레시안>과 월간지 <민족 21>에 실었던 현지 취재기 가운데, 핵개발 논란을 둘러싼 미국-이란 갈등을 주제로 한 이란 현지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따로 정리한 것이다.

### "이란 핵개발은 평화적 목적"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호메이니혁명)의 성공으로 친미 팔레비 독재왕조가 무너진 뒤 이란의 석유이권을 잃은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형태의 경제제재를 펴왔다. 21세기 들어 미국-이란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이란이 핵에너지 개발 움직임을 펴면서 더욱 강화된 모습이다.

이란 테헤란 거리에서 지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핵무기 애길 꺼내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이란을 지키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거리의 보통사람들은 반미 이슬람의 자존심을 살리는 핵국가 이란을 꿈꾸는 모습들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거리의 대중적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란 정부나 언론사, 국책연구소들이 하나같이 내놓는 논리는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론'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의 석유자원 보유국인 이란이지만, '언젠가 다가올 석유고갈에 대비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장이다.

“알다시피 이란의 석유매장량이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로, 석유가 풍부한 나라다. 그러나 석유는 유한한 자원이다. 언제까지 석유에 기댈 수는 없다. 석유는 이제 40-50년만 지나면 바닥이 난다. 우리가 핵에너지를 개발하려는 것도 바로 그런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순도 95%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이란이 만들려는 것은 5%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이다. 그걸 갖고 미국이 시비를 거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이란 데일리〉 모하마드 레자 에르파니안 편집국장).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국이다. NPT 4조는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아래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포함,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이란은 바로 그 조항에 바탕, 평화적 핵이용권을 갖는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우리 이란은 오래 전부터 ‘중동 핵 자유지대’를 주장해왔다. 중동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얘기다. 중동 비핵화를 방해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미국과 이스라엘이다”(나세르 사그하피-아메리 테헤란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테헤란 전략조사센터(CSR), “이란 핵개발은 석유 부족에 대비한 것”

이란 사람들은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이란과의 관계가 나아질 것인 기대감을 품고 있다. 그렇지만 관계개선에 앞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한둘 아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걸림돌이다. 이란의 핵야망을 의심하는 미국의 주도 아래 유엔 안보리에서 모두 3차례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테헤란 길거리에서 만난 몇몇 이란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이란을 지키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테헤란 지식인들이 전하는 이란의 공식입장은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론’이다. 어디까지나 ‘석유고갈에 대비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얘기다. 국제문제와 안보를 다루는 이란 싱크탱크 가운데 가장 큰 테헤란 전략조사센터(CSR) 연구원들을 만나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들어봤다.<sup>1)</sup>

○ 아미르 자미니니아(CSR 부소장)= “우리 이란 땅에 석유가 많이 묻혀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석유는 유한한 자원이라서 21세기 안에 바닥이 난다. 그렇다면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데...현재로선 원자력 에너지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원자력발전소를 세우려는 것뿐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흑색선전이다. 이란이 원자력발전소를 여기저기에 세우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보장하고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 주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들 국가의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될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하마스나 레바논 헤즈볼라에게 핵무기를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다”

○ 라만 가흐레만포르 박사(CSR 군비축소 분야 전문연구원)= “미국과 이스라엘이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보호막 아래 핵확산금지조약(NPT)

1) CSR(Center for Strategic Research)은 1989년에 설립된 이란 최대의 관변 싱크탱크로, 이란의 대외정책과 안보,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끌어간다.  
<http://www.csr.ir/Center.aspx?lng=en>

에도 가입하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적어도 2백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이란은 NPT가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 독점을 위한 불평등조약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해왔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이란은 NPT에도 가입해 있고, IAEA의 사찰규정에도 성실히 따르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니 어느 나라가 국제법을 어기고 중동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냐?"

### 이란 핵정책 세 가지 시나리오

외교관 출신으로 이란의 안보관련 싱크 탱크인 전략연구센터(CSR)의 선임연구원인 나세르 사그하피-아메리는 "현 시점에서 이란이 굳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 논리는 이러하다. "이스라엘이 핵을 가졌지만, 지난 2006년 여름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보았듯이 핵무기가 전쟁의 승패에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등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란 지도자들도 그런 측면을 잘 헤아리고 있다"

사그하피-아메리는 이란의 핵정책을 일본에 견준다. "일본은 플루토늄 축적량도 많고,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췄다. 우리 이란이 나아갈 방향도 바도 그런 쪽이다. 이란의 핵전략은 필요하다고 결정만 내린다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적 능력을 갖추되, 그때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구도다. 다시 말해서, 현시점에서 이란이 굳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들 이유가 없다. 멀지 않아 다가올 석유고갈시대를 맞아 산업용 핵에너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이란 정부가 설정한 현시점에서의 전략적 목표다"

사그하피-아메리는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정책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꼽는다. 첫째는 북한모델, 둘째는 리비아 모델, 셋째는 일본 모델이다. 북한모델은 핵개발을 밀어붙이는 방식을 가리킨다.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던 북한은 2003년 NPT를 다시 탈퇴선언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거부하고, 2005년 핵보유 사실을 밝혔고, 끝내는 2006년 핵실험에 나섰다. 리비아 모델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폐기하는 경우다. 리비아는 지난 2003년 우라늄 농축 포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미국은 리비아 모델을 보기로 들면서 이라크 침공을 합리화하고 이란과 북한을 몰아세워왔다. 일본모델은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한 국가가 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핵연료를 충분히 활용할 제반 능력과 대규모 설비를 갖춘 경우다"

### "이란의 핵모델은 북한 아닌 일본"

이란이 이 가운데 어느 모델을 택하는가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사그하피-아메리는 내다본다. "이란이 북한모델을 따를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보기로 든다. 핵을 갖지 못했던 후세인 정권은 미국의 침공으로 무너졌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6자회담이란 틀로 달래려는 모습이다.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이란도 따라서 북한모델을 따라가려 한다는 얘기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란은

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이란은 북한모델을 따를 수밖에 없다”

사그하피-아메리는 리비아모델은 리비아와 이란의 대미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리비아와 미국의 관계는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부터 이미 개선되고 있었다. 그런 움직임은 2기 클린턴행정부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이란이 결국에는 리비아모델을 따를 것이란 환상을 품고 있지만, 한마디로 리비아와 이란은 다르다. NPT는 기존 핵보유국들이 핵을 독점하려는 불평등조약임을 우리 이란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이란은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 핵발전소에서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지녔고, 따라서 이란이 지향하는 모델은 일본모델이다”

### 미국과의 수교 바라는 이란 지식인들

이란 젊은이들이 보수적 종교사회에 반감을 품던 아니든 간에, 미국 얘기가 나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한목소리로 비판적이다. 그런 반미감정과는 별개로 지금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로 끊어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싶어 한다. 보수파나 개혁파나 접근방식에 선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란은 북한과 닮았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수교를 맺을 경우 안보위기가 덜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투자 제한 등 이란에 가해졌던 경제제재 압력이 느슨해져 이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이란 테헤란에 친미정권을 세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 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립화된 온건한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이어졌던 미국의 대이란 강공책이 이란 유권자들로 하여금 대미 강경론을 부르짖는 보수강경파에게 표를 던지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테헤란대학의 호세인 사이프자데 교수(정치학)는 “미국이 이란 안의 보수-중도-개혁-신보수의 여러 정치집단 사이의 세력균형을 올바르게 헤아리고 대이란 정책을 보다 사려 깊게 펼쳤다면 개혁파가 정권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란 알라메흐 대학의 다부드 헤르미다스-바반드 교수도 미국의 이란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1979년 뒤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을 봉쇄해 오면서 때로는 군사적 위협마저 서슴지 않았어도 이란은 살아남았다. 문제는 미국의 강공책이 이란의 민주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다. 이란의 보수강경파들이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은, 만에 하나 미국의 강압적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곧 그들이 미국에 양보한 패배자라는 인상을 이란국민들에게 심어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개혁파의 정치적 입지를 좁혔고, 오히려 보수강경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켰다고 이란 지식인들은 지적한다. 이는 한반도에도 들어맞는다. 미국의 대북 강공책이 과연 한반도의 누구를 이롭게 하고 누구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생각해볼수록 만드는 대목이다.

## 누구를 위한 이란 제재 동참인가

끝으로 생각해볼 점 하나. 지정학적으로 이란은 미국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사정거리 3천 km의 샤하브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중인 이란이지만,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만한 처지도 못 되고 능력도 안 된다. 그런데도 미국은 왜 이란이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핵에너지 개발문제에 그토록 과민반응을 보일까. 그 해답은 두 사람의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미 시카고대 교수)와 스티븐 월트(미 하버드대 교수)가 2006년3월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이스라엘 로비(Israel Lobby)의 문제점을 용기 있게 다룬 글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 외교정책'에 담겨있다.<sup>2)</sup> 그 글의 요점은 "미국이 이란 핵개발 문제에 그렇게 신경 써야할 절실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에 매달리는 것은 다른 아닌 이스라엘 로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이란을 봉쇄하는데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한미동맹이란 명분 아래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나선다면? 한국의 국가이익과 대외정책이 유대인들의 손에 돌아나는 셈이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

2) John Mearsheimer & Stephen Walt, Israel Lobby and U. S. Foreign Policy. *London Review of Books*, Vol. 28 No. 6 · 23 March 2006. 2008년에 같은 제목의 단행본 출간(출판사는 Farrar, Straus and Giroux).

## 2010 NPT 재검토회의와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김수현 /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정책연구위원

### ■ 2010 NPT 재검토회의 준비과정<sup>3)</sup>

- 부유하는 오바마의 핵정책: 핵군축과 핵억지의 사이에서
  - 2009.4월 프라하 연설
    - : 핵없는 세계의 이상과 핵억지 정책 및 핵억지력의 유지 동시 천명
  - ‘NPR(핵태세검토보고서) 2010’
    - :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이용한 공격 감행할지라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 But, 북한과 이란은 예외. / 핵보유국들 간의 ‘핵 선제불사용’에 대해서는 언명하지 않음
  - 2010.4월 미·러 간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서명과 ‘핵안보 정상회의’
    - : 전략핵무기 감축의 재개 / 핵물질에 대한 안보의 강조(테러집단, 이란, 북한 등)
- ‘핵무기 전면 철폐’라는 국제규범 확립의 공감대 형성
  - : 포괄적 접근으로서 ‘핵무기금지협정’ 부상
  - 2008.10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핵무기 철폐를 위한 5개 항목 제안
    - i. 핵무기금지협정 혹은 개별조약의 틀 확립,
    - ii. 핵무기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금지 보장
    - iii. CTBT, FMCT(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중동지역 등에 비핵지대 설정 등의 다자적 협의의 보급,
    - iv. 핵보유국의 책무와 공개성 및 투명성,
    - v. 모든 WMD의 폐기, 미사일, 우주무기 제한을 위한 노력의 경주
  - 2006.6월 ‘브릭스 위원회(스웨덴 정부 후원, 한스 브릭스 전 IAEA 사무국장이 위원장)’ 보고서
    - : 제 30항목에서 “... 핵무기의 비합법화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한다.”

---

3) 이준규, “핵군축의 세계적 동향과 한반도: 2010 NPT재검토회의를 전후해서,” (국회사무처, 2010) 참조.

- 2006.11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연설  
: 타임테이블 형태로 핵무기 철폐를 위한 실행계획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 2007-2008년 미국 전직 고위관료들과 전문가집단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한 정책 전환 주장
- 새로운 의제를 위한 연합과 비동맹 국가들의 활동
  - 안전보장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보증
  - 비전략핵무기(전술핵무기) 개발과 배치 철회
  - NPT회의에서 핵군축 의무 이행과정을 보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
- 비정부 기구들의 대응: 중견국가 이니셔티브(MPI), 핵무기금지협정(NWC), 히로시마-나가사키의정서
- 중견국가 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Peace Bureau,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등 8개 국제NGO가 직접 관여, PNND 등과 연계

#### 2010.4월 2010 NPT 재검토회의 관련 입장과 권고 발표

-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보유국들의 역할 강조
- (핵관련 통계 등) 투명성 제고 ·CTBT의 무조건 비준 ·FMCT 체결 위한 협상 지지
-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핵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도)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역할 축소 제거간다는 명확한 독트린 천명
- 핵전략 감축 협상 환영과 거기에 비전략핵무기 및 실전에 배치되지 않은 핵무기 포함
- 중동(비핵지대)문제 ·비확산과 핵연료사이클 관련 다국적 규제와 저농축우라늄 बैंक, 국제 에너지기구 설립
- 핵무기금지협정(NWC): 세계적 반핵·핵군축 운동(단체들)은 핵무기금지협정과 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를 2010 NPT재검토회의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
- 1997년 법학자, 과학자, 시민사회 등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코스타리카가 유엔 제출.
- 주요 내용: i.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이전,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 ii.핵무기 보유국들은 단계별로 그 무기고 해체, iii.사용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 금지, iv.수송 수단 파괴와 비핵화
- 2009.4월 유럽의회가 핵무기금지협정안과 히로시마-나가사키의정서의 수정 도입 승인(프, 영은 여전히 핵무기금지협정에 반대)
- 히로시마-나가사키 의정서: 평화시장회의(Mayors for Peace)가 주도한 문서
- 2020년까지 핵무기 없는 세상 구축위해 핵무기보유국들과 비핵국가 모두 핵무기 획득과 관련한 모든 활동 중단을 중단하고 핵군축 달성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
- 핵무기금지협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본합의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한 협상의 즉각 개시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사무국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 ■ 2010 NPT 재검토회의의 과정과 결과

### ○ 2010 NPT 재검토회의의 전반적 모습

- 2010.5.23~5.28

3개 주위원회 토론 내용 5월 14일까지 집약 제출

의장보고서 초안 5월 24일 제출

최종문서 5월 28일 채택

- 회의장 내 핵보유국 대 비핵국가, 핵보유국들간 쟁투, 비핵국가들 중 한국, 일본 등 핵억지 의존 국가 대 새로운 의제연합, 비동맹국 국가 그룹 간의 경합 / 회의장 밖 NGO와 민간대표단의 워크숍, 집회, 시가행진의 병존

- 여러 회의 중 주위원회1이 주목받음. 핵무기금지협정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합의가 형성될 것인지가 관심사였기 때문

\* (일반연설→)회의: 주위원회1(핵군축), 주위원회2(보장조치), 주위원회3(평화이용)/부속회의(핵군축 이행계획 및 안전보장 관련, 중동문제 및 지역문제 관련, 탈퇴 및 제도화 관련)

### ○ 최종문서<sup>4)</sup> 채택, But 핵군축 구체화에서는 모호한 내용들

- 난산 끝에 2005년과는 달리 최종문서 채택: 중동비핵지대 회의 등과 관련한 중동 지역 국가들과 미국 등의 줄다리기 끝에 2012년 중동비핵지대 회의 개최와 이스라엘의 NPT가입 촉구 명기

- (재검토회의전까지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구체화를 기대했던) 핵무기금지협정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그 협정의 내용적 의의(제안한 의도)라고 할 수 있는 핵군축 이행과 그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

: 최종문서에 “유엔 사무총장의 핵무기금지협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 5대 제안에 유의한다.” “핵보유국은 2000년 합의의 모든 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을 서약한다. 핵보유국은 구체적 조치에 대해 신속하게 노력하고 그 결과를 2014년에 준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5년 재검토회의가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는 주위원회1의 위원회 의장 초안의 “유엔 사무총장의 핵무기금지협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 5대 제안이 이 목적(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기 위한 법적 틀거리의 구축)에 도움이 된다.” “2011년까지 구체적 조치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2012년 준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결과를 근거로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에 완전철폐를 위한 로드맵을 협의할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구절에 비해 핵무기금지협정에 대한 평가, 시기, 구속성 등에서 크게 후퇴.

- 비핵지대: 진전, But 동북아비핵지대는?

·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조약과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등에 핵보유국들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 요구

4)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legal/npt/revcon2010/DraftFinalDocument.pdf> 참조 바람.



- 중동비핵지대: 회의를 2012년 개최 명시, 구체적 행동계획 등 세부사항은 언급 부재, 2012년 회의 결과에 강한 구속력이 부여되고 있지도 않음, 이스라엘과 이란의 참석 보장 없어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의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
  - 동북아비핵지대: 동북아지역 비핵화를 매니페스토에 내걸었던 일본 정부도 언급 부재, 한국 정부도 물론~. 한일 PNND와 시민단체 등이 뉴욕에서 컨퍼런스 개최.<sup>5)</sup>
- 대 이란과 북한
- 이란에 대해서는 핵개발 사실 은폐, 유엔 안보리 결의 거부 등 NPT를 위반했다는 과거 행적 명시
  - 북한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09년 수행한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판하고, 이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상기시키며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
- \* 국제적 핵군축과 관련한 노력과 배치되는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등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명시함. 그러나 미국 등이 애초에 의도했던 NPT 위반과 탈퇴 선언 국가인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조약화하거나 합의문에 넣는 데는 실패.

## ■ 재검토회의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평가와 과제

- 2010.8월 원수협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국제회의 선언과 결의안 등 참조
- 주변 상황 : 올해의 경우 반기문씨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최초로, 그리고 주일 미대사 등이 미국 정부의 고위급 공식 대표로는 최초로 히로시마의 피폭위령제(관 주도 공식행사) 등에 참석함으로써 일본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 반 총장은 ‘피폭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핵무기금지조약 제정 촉구.
- \* 칸 나오토 일본 총리의 경우 피폭위령제에서는 피폭자의 비핵특사 구상 등을 밝히는 등 약간 전향적인 자세를 밝혔으나, 식후 기자회견에서 “핵억지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세계대회 등에서 나온 현재의 핵심적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언동을 함.
- 평가 : 2010 NPT재검토회의가 핵무기 폐지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 위해 핵무기폐절조약(핵무기금지협정)의 교섭 개시를 목표로 삼았다고 함. 최종문서 등에 핵무기 없는 세계가 국제정치의 명확한 목표가 되었으나, 핵무기폐절과 관련한 구체적 약속에서 부족하다고 판단. 그 까닭은 핵보유국 등이 ‘핵억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핵억지력론’은 그들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의 핵우산 의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핵보유와 핵확산의 요인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의 최대 장애라고 규정
- 과제 :
- 핵무기폐절조약의 조속한 교섭 개시와 체결 요구, 그 실현을 위한 시민, 자치체,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활동 전개
  - 핵억지력론 타파, 핵보유국과 핵우산의 밑에 있는 일본 등 동맹국들에서 그것과 결별하는 운동의 전개
- ↔ 피폭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 이런 과제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

5) 구체적 내용은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10> 참조 바람.

- CTBT 등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 촉구, 핵무기의 선제불사용과 사용금지 요구, 미사일방어 반대, 외국·공해에 배치된 핵무기 철거 요구, 비핵지대의 창설과 확대 지지(국제회의 선언, 히로시마 결의에서는 일본 차원의 문단에 비핵일본선언), 북한 핵문제의 6자회담을 비롯한 평화적 해결 촉구

○ 원수금 세계대회: 세계대회 선언(문) 등 참조

- 평가 : 핵확산과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의해 NPT체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번 2010 재검토회의에 의해 재생되었다. 최종문서는 핵 폐절의 로드맵(行程表)나 기한설정 등이 없는 등 불충분한 점이 있으나 핵무기 폐절의 전망을 열었다고 함. 특히 반총장 등의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전 참가와 반총장의 연설을 높이 평가.

- 일본이 해야 할 책무 :

- 원수협과 공통적인 것: 핵우산으로부터 탈피, 비핵3원칙의 엄수와 법제화, MD 반대, 기지 반대
-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노력) 명기
-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가동 등 플루토늄 이용 정책이나 노후 원자력발전소 등 위험 원자력시설 가동의 즉시 중지 및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에 의한 탈원자력발전소 사회 지향 천명
- \* ノーモア・ヒロシマ、ノーモア・ナガサキ、ノーモア・ヒバクシャ、ノーモア・チェルノフイリ(원수협과 원수금의 차이, ∴평화적 이용에 목매는 비동맹국가와의 연대)、ノーモア・ウォー！